

“숨은 확진자 어쩌려고”...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에 ‘불안’

14일부터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학교 현장도 격리 면제 시민들 깜깜이 확산 우려 “가족 간 감염 확률 높아서 불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 2년간 실시했던 밀접접촉자 격리 제도를 사실상 접은 셈이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 숨은 감염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13일까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7일간 등교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등교가 가능해졌다.

이달 초 동거인이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분류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도 방역 체계에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간 적용이 유예됐다. 사실상 이날부

터 밀접접촉자 격리 제도가 모두 사라졌다.

시민들은 감염이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족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숨은 감염자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38)씨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동거인도 확진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며 “적어도 다른 학생들에게 가족이 확진됐다는 정보는 줘야되지 않나.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36)씨는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것 같다”며 “당장 음식이 나와도 이후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선생님들께 물어볼 수도 없

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완화된 방역 지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도 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검사를 피하겠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확진되더라도 스스로 약 먹고 치료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동작구에서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직장 동료가 동거하는 친구가 확진됐는데 본인은 음식이 떠다며 출근했다가 집단감염이 된 적이 있다”며 “스스로 방역 긴장감을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최모(34)씨는 “내가 확진될 경우, 결혼식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 만날 때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며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 먹고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4살 딸 도로유기’ 친모·내연남...‘혐의 인정’



지난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네 살 배기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내연남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광경평)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기일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0대·여)씨와 B(20대)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유기 당시 피고인들의 정신적 판단 능력들을 감안해 양형 조절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B씨는 종전에 군대 갔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훈련소에서 귀가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특히 친모 A씨와의 관계, 가정환경, 부부관계를 포함해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한 부분들과 관련해 양형조사 명령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일에 속행하겠

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냐”는 질문에는 “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경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여)양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km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델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 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C양은 현재 아동보호소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5~11세 오는 31일부터 백신접종...사전예약 24일부터 가능

정부 “이번 주 유행 정점”...내달 먹는치료제 9.5만명분 도입 12~17세 어제부터 3차접종...mRNA 이상반응 ‘심근염’ 추가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9만5000명분을 적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을 14일부터 시행한다. 5~11세 소아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첫 주 19만명, 지난주 28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 주 중 정점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위중증 확진자 수는 1032명으로 직전 주 대비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과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2월 4주 1.46에서 3월 1주 1.30, 3월 2주 1.29로 2주째 감소하고 있다.

전 2차장은 “정부는 향후 확진자 전방과 현 방역상황에 맞춰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한다”며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파스로비드 9만5000명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하루에 1인당 2만원씩 5일분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 2차장은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5~11세의 접종은 오는 2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31일부터 실제 접종이 시작한다.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

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2차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는 한편,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계적 연관성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반응은 기존 모세혈관누출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다.

한편 전 2차장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과 관련해 “2만4000ha 이상의 산림 피해 면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북·강원지역 산불로 주택 400여채가 소실되는 등 1700여건의 재산 피해와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